

# 내부 공익신고 처리기준

제정 2010. 4. 9.

개정 2013. 10. 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3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제40조(행동강령의 운영)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와 부조리행위에 대한 내부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3.10.2.)

**제2조(신고대상 행위)** 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부조리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산업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4.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제3조(신고의 방법)** ①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은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및 감사 담당부서(클린신고센터)에 우편, 이메일, 클린신고함,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부조리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인 부조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보완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처리)**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원장은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원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원장은 공익침해 및 부조리 행위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0.2.)

**제5조의 2(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산업진흥원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산업진흥원은 직원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내용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신설 2013.10.2.)

**제6조(보상금 지급)** ①원장은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저하게 산업진흥원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에 윤리경영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보상의 적정성 및 규모 등에 대한 보상심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의 2(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원장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표창 및 포상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13.10.2.)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등에서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직원 행동강령 등 산업진흥원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2010. 4. 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10. 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가. 신고에 의해 산업진흥원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

수익증대(손실감소)액	지 급 금 액
일천만원 이하	해당금액의 10%
일천만원 초과 ~ 오천만원 이하	백만원 + 일천만원 초과금액의 5%
오천만원 초과 ~ 일억원 이하	삼백만원 + 오천만원 초과금액의 3%
일억원 초과	사백 오십만원 + 일억원 초과금액의 2%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액 : 내부공익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산업진흥원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하며,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함

나. 다른 임직원의 금품·향응 등 수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수수금액의 2배 이내에서 지급

다. 기타

○ 보상금 지급한도액 : 일천만원

○ 가목 내지 나목의 보상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유리한 기준금액으로 지급

○ 동일한 부조리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지급 가능

○ 가목 내지 나목의 보상사유 이외에도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 지급 가능

【별지】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		전화번호	
	주소			
신고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신고 내용				
증거 서류				
비고				